



유제품 수입개방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만 재
서울우유 생산 관리부장

1. 낙농시장 개방과 국내의 시장상황

낙농시장의 개방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고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 요구도 형식적인 정부의 협상태도로 무산될 지경에 있다. 이제 우리는 개방이후의 문제를 타결할 자세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앞질러진 물인 것을 거기에 연연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먼저 우리도 낙농산업과 비육우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첫째, 낙농은 2000년 까지도 65~70%의 자급율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버틸 수 있고, 그후에 최소 60%이상의 자급율로 어느 경우든 현재보다는 절대 생산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비육우는 '97년까지는 다소 생산량과 소비의 안정이 지속될 것이나 그 이후로는 국내생산 비육우의 급격한 시장열세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낙농산업의 시장개방 이후 총체적인 전망과 예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경제연구원, 유가공협회, 낙농육우협회, 축협중앙회 그리고 서울우유등이 예측한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 판단된 정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향후 7년

뒤인 200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은 1993의 44kg(추산)에서 약 70%나 늘어난 73kg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원유량으로 따지면 약 337만톤 정도가 된다. 이량도 1993, 1994에 생산될 연간 총산유량 180만톤의 1.87배나 된다. 그중에서 음용유등 신산유제품과 같이 수입이 불가능한 유제품에 총 원유수요의 60%가 충당되고 나머지 가공유제품 40%의 1/4~1/5이 국내 원유로 소요될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는 337만톤중 약 70%인 236만톤의 원유가 국내조달 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양도 현재 생산량 180만톤보다 31%가 많은 양이다. 따라서 개방이후 2001년까지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 우유 총생산량 5억톤 중 약 15~18%가 교역되던 1980년대 중반 이후 우유와 유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교역량은 5% 수준으로 감소되어 가격도 상승되고 있다. EC를 비롯한 대부분의 낙농국들이 10년이상 계속된 계획생산제도에 의해 재고가 바닥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UR타결 약속대로 수출보조금은 없애고 국내 생산보조도 감축하게 되면 국제시세도 더욱 상승

낙농의 장래 예측

○ 낙농 사육기반, 우유수급

구분	1992년	2001년	비고
사육기반	낙농가수(천호)	28	17 (연평균 4.3% 감소)
	젖소두수(천두)	508	590 (연평균 1.7% 증가)
	호당사육규모	18	35 (연평균 7.7% 증가)
낙농가소득	경산우 두당(천원)	1,443	2,239 80%가 유대수입
	농가호당(천원)	15,873	47,019
	전농가소득(백만원)	444,444	799,323
우유수급	수요(천톤)	1,920	3,372 (연평균 6.5% 증가)
	생산(천톤)	1,816	2,486 (연평균 3.6% 증가)
	두당 산유량(kg)	5,954	7,023 (연평균 1.5% 증가)
	자급율(%)	95	74
	국민 1인당 소비량(kg)	44	71

○ 유제품 수요

구분	1992년		2001년	
	원유환산량	(사용율)	원유환산량	(사용율)
시유 (천톤)	1,386	(72.2)	2,032	(60.2)
발효유 (천톤)	134	(6.9)	280	(8.3)
분유 (천톤)	137	(7.2)	287	(8.5)
치즈 (천톤)	66	(3.5)	259	(7.7)
버터 (천톤)	11	(0.6)	18	(0.5)
연유 (천톤)	8	(0.4)	13	(0.4)
기타 (천톤)	179	(9.3)	485	(14.4)
계 (천톤)	1,920	(100)	3,372	(100)

될 것이다. 우선 이와같은 상황파악을 하고 시장개방 이후 낙농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세계의 낙농생산 상황은 고도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집약생산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자급을 기초정책으로 한 낙농정책을 지난 수십년간 전개해 온 결과 70년대에는 잉여, 80년대는 생산감축(계획생산), 90년대는 안정공급(자급)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전유럽이 식량자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자급정책이 강조된 나머지 70년대에 거의 자급을 달성하면서도 특히 우유는 잉여사태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사이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생산억제 체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수급안정에 접근하였다. 예를들면 EC와 영연방제국(캐나다, 호주등)의 Quota제도, 미국의 PIK 및 Termination 계획, 일본의 계획생산등이 그 사례이다. 그 결과 80년대 말 이후 세계의 우유 총공급은 수급안정으로 전환되고 EC와 미국의 잉여유제품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되어 지금까지 잉여유제품의 세계 무역시장에서 덩핑 거래되던 물량이 1/3로 감소, 1985~1986년에 세계무역

거래량이 총 우유생산량의 15~18%나 되던 것이 1990년대 초에 5%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그림1참고)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증가되어 온 선진국들의 GNP와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 및 산업구조의 개편(1, 2차 산업구조가 3, 4차 산업으로 이전)등으로 낙농가 수는 계속 감소추세여서 모든 낙농선진국들은 자국민의 우유자급을 위하여 낙농가들을 농촌에 묶어두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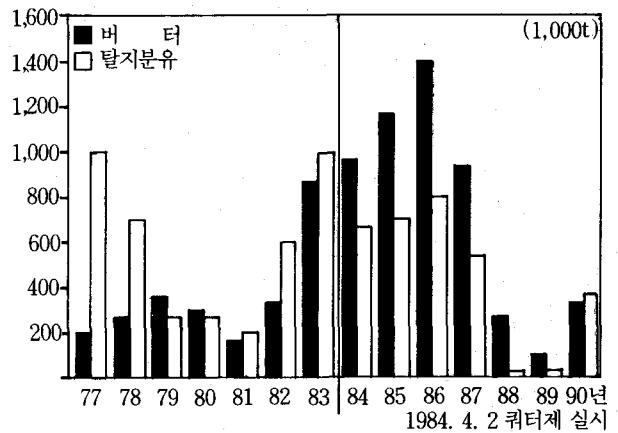


그림1. EC내 버터, 탈지분유 재고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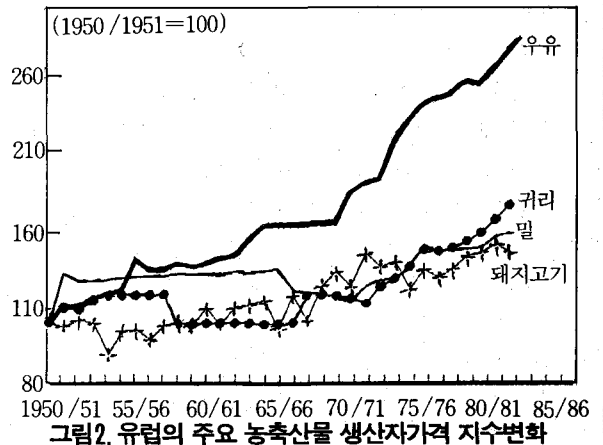


그림2. 유럽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자가격 지수변화

모든 농업중 낙농이 노동조건과 환경이 가장 열악하므로 그러한 이농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부문이다. 선진낙농국들이 채택한 그러한 낙농유지 정책은 낙농가에 대한 높은 생산자 보조정책과 우유소비자에 대

한 소비자 보조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보조금상당량(PSE-Producer Subsidy Equivalent)이 20~30%인 반면에 우유는 특이하게 또 유일하게 60~90%이다. 이와 같은 보조금은 소비자에 대한 간접보조가 되고 있으며, EC의 목표가격정책, 일본의 부족분지불제도, 스웨덴의 소비자가격 직접보조제도 등이 소비자 보조정책의 사례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낙농에 대한 높은 생산자보조는 낙농을 자국내 자급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보조의 유지는 UR협상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조유지가 되는 이상 국내 또는 역내시장개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낙농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사례로 UR협상중에도 EC는 낙농시장 개방불가를 선언하였고, 미국도 북미경제블럭(미국, 캐나다, 멕시코) 구성시에 낙농은 각국이 개방치 않기로 한점(특히 미국은 대부분의 유제품을 개방치 않고 있음), 일본이 GATT로 부터 12개 농산물 미 개방품목에 대한 무역불공정 제소를 당하고도 분유는 어떠한 무역제제나 보복을 당해도 개방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예가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계낙농의 흐름을 파악할 때 낙농은 자급형산업이며 수출을 위해서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산하는 나라는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R협상 결과는 향후 국내보조금 총생산액의 5~1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에 해당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억원 정도의 보조가 가능하다.

2. 시장개방 시대의 낙농

그러나, 뉴질랜드는 물론, EC나 미국등의 지역으로 부터 유제품의 수입은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무리 각국이 자급체제로 낙농생산을 하더라도 수급을 정확히 맞출 수 없고, 또 총수요보다 항상 약간 상회하는 생산정책을 유지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총 소비량이 적은 시장은 언제든지 개방만 되면 침투, 잠식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대로 낙농선진국들은 높은 보조



경기, 경남지역은 식품공장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부산물사료의 개발과 이용이 유리하다. 호남지역은 풍부한 볏짚자원이 제공된다. 강원과 경북지방은 산지를 이용한 낙농경영형태, 즉 육성우 생산경영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낙농 생산기반 지원사업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추진이 되어야 한다. 낙농기나 낙농조합도 자기지역에 알맞는 생산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금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나 품질면에서도 우리보다 유리하므로 우리 낙농과의 경쟁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 80~90%의 생산보조를 받는 유럽과 캐나다의 낙농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경영여건에서 생산한 원유로 만든 유제품이 우리나라 시장 정도의 규모에는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본으로 부터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령 뉴질랜드 데어리 보오드와 일본의 유업체와 합작해서 뉴질랜드의 값싼 원료유제품으로 생산된 치즈나 버터, 연유, 환원 멸균유 등이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미 일본의 모리나가 유업과 같은 대유업체는 호주에 합작유가공장 건설을 완공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도 현재 우리나라 낙농가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경쟁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로 구제역(口蹄疫-Foot and Mouth Disease)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어서 소나 그 생산품의 수출이 불가능하지만 지난 10년이상 발병되지 않아 앞으로 구제역 해제지역으로 될 경우 가격과 거리면에서 절대 유리한 중국산 우유와 소가 물밀듯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북방축산세미나에서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 백두산 기슭의 400kg 크기의 한우가격이 우리돈으로 20만원대이므로 우리나라보다 10배이상 싸고, 젖소 송아지값이 우리의 30배나 싼 30,000원, 원유의 1kg당 농가판매 가격이 우리보다 15배 싼 20원 정도이니까 이들이 수입된다면 우리축산은 그날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의 산동성이나, 길림성, 요령성등은 그 지리적 위치나 기후등이 우리와

같은 조건이고, 물류의 유통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무역이 활발해지면 국내 유통과 다름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며, 이들 지역은 또 축산과 사료자원이 풍부한 곳이므로 우리에게 더욱 위협적이지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도 위에 설명한 주변상황을 살펴 보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낙농을 현재 상태로 보호하려 해도 Globalization이라는 거대한 세계경제, 사회, 정치의 물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개방화라는 것은 결국 Globalization의 목표의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또 세계시장이 Global화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계낙농의 흐름과 개방화에 대하여 우리도 여기서 두가지 상반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모든 국가가 우유·유제품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출위주가 아닌 자급형산업으로 낙농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생산의 특성상 수입의 여분 또는 정책적 재고에 의한 수출물량이 세계 유제품시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낙농시장은 쉽게 침투, 잠식될 수 있다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다. 시장의 개방이란 뜻은 시장의 경쟁을 의미하고, 상품의 경쟁은 가격과 품질에 의해서 판가를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격과 품질에 경쟁력을 높이면 된다. 우선 우리가 하나의 산업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련정책, 그 산업의 조직, 그리고 그 산업의 생산주체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국의 낙농경쟁력은 어떠한가?

첫째, 정책적인 면에서 국가가

① 낙농에 대한 확실한 장래를 보장해 주고 있다. (법적보장, 국경조치등이 장치됨 -영국, 캐나다의 MMB, 미국의 유제품에 대한 Waiver설정, 일본의 국가무역)

② 대부분의 낙농생산에 대한 금융제도는 장기저리

로서 낙농가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무세~3% 미만의 저리, 10~20년의 장기대부, 부채탕감 등)

③ 생산자재의 세금은 거의가 없거나 낮다. (사료의 관세, 부가세, 일반자재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④ 수급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제도화되어 있다. (미국의 CCC수매제도, EC의 수출보조, 일본의 유제품에 대한 국가무역 지정등)

둘째, 조직적인 면에서 낙농가 단체, 유업체들은

① 거의 90% 이상의 대부분 낙농가들이 생산자 조직인 낙농협동조합에 가입하므로써 우유의 거래교섭력과 낙농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서 적정한 원유판매가격의 보장, 낙농업의 정치적 영향력등을 구사하고 있다. (EC의 결성을 통한 CAP, 미국의 낙협연합의 대의정활동, 일본의 젠노와 중앙낙농회의 낙농정치연맹 등)

② 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가공사업등을 통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대정부 정책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다.

③ 낙농가의 생산성 향상, 생산활동 복지향상과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④ 유업체는 낙농가와 협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생산주체인 낙농가들은

① 우선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가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럽, 미국, 일본의 낙농가들이 화투치며 세계 여행이나 다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② 낙농업에 대한 소박한 자긍심과 경영개선에 대한 의욕이 있다.

③ 생산성의 꾸준한 향상을 달성하고 있다.

자신이 생산한 우유가 모든 국민이 마신다는 책임감으로 깨끗한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생산주체인 낙농가는 무엇보다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농은 우유라는 상품적 특성을 가진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인데 우유로 매일 생산되고(생산의 계속성), 부피가 크며(부피성), 생산기반의 확보에 장기

간의 시간이 필요(생산의 장기성)한 특성을 가지므로 어떠한 농산물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지만 3D의 작업환경을 극복하고 일하지 않으면 결코 경쟁에 이길 수 없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작업은 우선 생산원가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기록에 의한 것소의 능력검정과 사양관리, 유방염의 철저한 예방과 관리, 번식력의 향상 능률적인 작업계획과 시설, 조사료의 확보등이 낙농생산성 향상의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유의 위생적인 질을 향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생등급제에 의한 유대의 차등가격제도 도입으로 유질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낙농가들이 유질의 선진화만이 시장개방 이후에도 우리나라농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낙농이 생산성의 면에서 선진 낙농국보다 약 15%정도 뒤떨어져 있고 노동효율이나 사료효율에서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질도 국제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자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낙농가 단체인 조합은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생산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생산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낙농의 가장 큰 취약점인 사료자원의 비효율적 공급과 이용에 대하여 조합은 공동구매 이용과 TMR 사양체계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전략부본들, 예를 들면 유방염예방체제, 계약진료서비스, 효율적인 시설개선, 기계화지침과 기준, 능력검정과 기록의 조직적 활용등을 강구해야 하며, 낙농생산 여건개선을 위하여 육성우 위탁사육체제, Helper 제도, 기자재의 공동구매 공급, 생활물자의 공급등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최소한 선진낙농국들이 낙농가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선진낙농국들의 재정적 지원, 금융제도, 생산자재에 대한 세제상지원, 장애에 대한 희망적인 보장등이 필요한 것들이다. 또, 무엇보다 우리



뉴질랜드는 물론, ECU 미국등의 지역으로 부터 유제품의 수입은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무리 각국이 자급체제로 낙농생산을 하더라도 수급을 정확히 맞출 수 없고, 또 총수요보다 항상 약간 상회하는 생산정책을 유지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총 소비량이 적은 시장은 언제든지 개방만 되면 침투, 잠식될 수 있다.



나라 낙농의 산업구조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인 집유제도, 검사제도, 가격제도, 수급안정 장치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낙농진흥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낙농산업의 기초가 안정되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낙농인들의 노력은 비단 시장개방이 되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인 소비자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3. 낙농의 구조개선 작업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낙농의 전반적인 구조개편 과제이다. 우리나라 낙농은 처음부터 도시인의 음용유 소비로부터 출발하였고, 지금도 음용유 소비가 7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생산기반은 당연히 도시근교로 발달하게 되었고 그 후 교통, 통신, 전기의 발달로 농업지역과 산지로도 확산되어 왔다. 아직도 우리나라 낙농의 약 60%나 도시근교형 낙농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근교형의 낙농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 예로 일본의 나고야낙농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나고야/오사카를 잇는 식품공업이 발달된 도시지역으로 착유집약적 낙농경영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 목장의 규모는 50~80두, 산유량은 7,000~8,000kg으로서 북해도의 초지형 낙농경영보다 훨씬 더 생산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더우기

이들은 식품가공 부산물을 싼값으로 대량획득할 수 있어서 북해도 낙농보다 생산비가 더 낮아서 일본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낙농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착유우만 사양하며, 생산된 송아지는 모두 1, 200km나 떨어진 북해도의 육성우위탁 목장에 팔아 버리고 초임우를 다시 육성우목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또 공동 TMR 배합소의 운영, 낙농헬퍼의 이용, 분노 공동처리장(Green Base)의 운영등 낙농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일본이 전후 식량자급자원의 공급기지로 전략개발한 북해도를 낙농과 전분생산(고구마, 감자등)지대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지원과 보조로 발달된 북해도 낙농과 전분생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GATT로 부터 미개방 농산물 제소를 당했을때도 낙농과 전분은 어떠한 GATT의 제재조치를 감수하더라도 개방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그러한 북해도 낙농보다 나고야의 도시근교형 낙농이 오히려 시장개방에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는 서울·경기와 부산·경남지역의 도시근교형 낙농이 생산성, 사육규모, 생산원가등의 면에서 호남, 경북, 강원등의 평야 농업지역이나 산간지역보다 더 앞서있다.

경기, 경남지역은 식품공장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부산물사료의 개발과 이용이 유리하다. 호남지역은 풍부한 볏짚자원이 제공된다. 강원과 경북지방은 산지를 이용한 낙농경영형태, 즉 육성우 생산경영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낙농 생산기반 지원사업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추진이 되어야 한다. 낙농가나 낙농조합도 자기지역에 알맞는 생산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서울우유의 예를 들면 도시근교형 낙농이 대부분인 조합원의 생산지원과 지도사업의 핵심은 조합원의 목장경영 형태를 착유집약적 낙농경영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 전략적 생산지도 부문의 낙농경영개선프로그램(SQQM), 육성우위탁사육사업의 추진, TMR시스템의 공급, 계약진료체제의 이용등과 생산환경 개선부문의 낙농헬퍼제도, 낙농기자재 공동구매등의 사업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유제품의 유통조직의 강화와 가격경쟁

최초거론된 우리나라 원유가격의 비교열위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원유가격이 경쟁국 즉, 낙농선진국의 그것에 비하여 대체로 약 30%정도 높은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여러가지 낙농국들의 정보통에 의한 자료들과 간행물들에 나타난 각국의 원유가격을 비교해 보아도 실제로 그러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원유가격만 가지고 과연 우리 낙농이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음용유의 경우를 보자. 음용유는 수입개방이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입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분명 수입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원유가격이 30%나 비싸니 소비자도 그만큼 비싸게 사먹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수입 유제품쪽으로 손을 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정부의 물가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우유를 그만큼 비싸게 사먹고 그것이 물가를 부추긴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 인식된 생각이다.

첫째, 음용유의 소비자가격인 200ml팩 한개 300원 중 원유가격의 비중은 28%에 불과한 80원에 지나지 않는다. 낙농선진국들의 원유가격에 30%정도 싸다면 팩 한 개당 소비자가격 인하요인은 약 25원이 된다. 이 정도의 원가차이는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어 버려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300원이 될 것이다.

둘째, 현재조사된 낙농국들의 원유가격은 60~90%의 높은 생산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격이다. 만일 UR협상 약속대로 보조를 없앤다면 거의 모든 낙농선진국들의 원유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낙농인들은 시장개방이후에도 가장 큰 낙농시장인 음용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수입유제품의 시장대체 효과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유통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음용유는 어느 나라에서도 소비자 가까이에서 생산되어 처리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고 또, 그러한 체계

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생산기반의 성장과 소비자의 확산이 균형을 잃고 낙농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엄청난 물류비용을 낭비하고 있고 필요없는 유통비용을 허비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낙농가들이 서두에 지적한대로 음용유를 중심으로 한 신선유제품 시장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원유 생산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낙농협동조합으로 모든 낙농가들이 가입하여 원유의 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 음용유의 생산 공급체계와 시장을 단순화, 근거리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낙농조합들의 연대적 시장구축을 실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최근 덴마크의 낙농조합인 MD(Mejeriselsabat Danmark)협동조합이 전국 낙협과 합병하여 하나의 상표로 전국시장을 구축한 사례가 바로 그 방법이다. 그 결과로 음용유의 유통비용을 지금보다 적어도 2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UR이후 낙농가들이 해야 할 일들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낙협으로 원유유통을 일원화하고 한편 전국의 낙협은

형식적인 단순한 모임에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의 연대적 체계구축과 대동단결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가공유제품을 보자. 음용유다음으로 원유 소비율이 높은 치즈와 분유류의 경우 현재의 국제시세를 보면 우리나라 치즈가격에 비하여 1/4~1/3 수준밖에 안된다. 분유류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 이유도 (1)수출보조금, (2)생산자보조금, (3)가공용원유 가격의 차등저가제도에 기인된다. 따라서, UR 약속대로 수출보조와 생산자보조금을 없앤다면 수입 가격은 국내가격의 70~80%선으로 되거나 국내가격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낙농가와 조합이 해야 할 일은 낙농국들이 과연 수출보조금과 생산보조를 철폐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자의 감시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음용유용 원유가격과 가공용 원유가격의 차등적용 가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가중평균값에 의한 낙농가가 받는 원유가격은 일정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해서 국내원유 사용비율에 따른 수입원료 유제품의 관세면세 조치를 완제품수입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일본의 사례)

낙농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정부가 할일

정책적고려

- 낙농진흥법의 조속 개정
 - ┌ 원유의 유통질서 안정제도화
 - ├ 원유의 수급 안정 제도화
 - └ 원유검사 제도의 개선
- 원유자급 목표의 설정과 추진
- 학교급식 등 국민 대중급식 제도확산
- 낙농의 장래에 대한 희망적 보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 세제지원 - 생산원료 및 기자재에 대한 관세 부과 면세
- 금융지원 - 생산설비, 기계화 규모 확대자금
- 사료자원 자유화
- 각종보조 확대 - 생산보조
- 생산성 향상기술, 연구지원
 - ┌ 낙농종합연구소 연구원
 - └ 젖소개량연구소
- 유통서비스 개선 지원
 - ┌ 시유물류센타설치 보조
 - └ 시유처리설비 보조
- 원료유제품의 국내원유 혼용시 관세 면제

조합의 할일

- 경영혁신
- 신선 유제품의 유통 혁신
 - └ 강력한 시장구조 구축
 - └ 낙농조합의 연대적 공동대응
- 낙농 신제품의 개발 보급
- 낙농 자조금 제도 시행
- 낙농생산 복지체계 추진
 - └ 낙농경영 개선 프로그램
 - └ 육성우 위탁목장 제도
 - └ TMR 시스템 보급
 - └ 헬퍼제도 후계자 육성
 - └ A/S 낙농기계 관리 제도
 - └ 계약진료 제도
 - └ 공동 분뇨처리 제도
 - └ 낙농기자재 100% 공동구매
 - └ 낙농연금, 보험제도
- 낙농 구조개선 표준화 보급, 지도

낙농가가 할일

- 생산성 극대화, 유질의 극대화
 - └ 유량 목표 8,000kg 이상
 - └ 유질 목표 20,000이하(세균)
 - └ 번식관리 13개월 이하
- 규모확대 노력
 - └ 부부 중심규모 경산우 30~70두
- 소득확대 노력
 - └ 경영합리화
- 조합이용 100% 달성
- 자조금 참여
- 원유 생산비 최소화로 원유가격 경쟁력 확보
- 열심히 목장 경영에 임할 것.

알팔파 큐브 공급안내

우리 협회는 낙농육우농가들의 조사료 구입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양질의 알팔파 큐브 및 건초를 공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가. 품 명 : 알팔파 큐브 및 건초

나. 공급시기 : 수 시

다. 예정단가 : 1) 큐브 : 작업장인도가-240원 /kg, 협회수송가-265원 /kg
 2) 건초 : 작업장인도가-300원 /kg, 협회수송가-330원 /kg

라. 공급장소 : 부 산

마. 신청시기 : 즉 시

바. 신청방법 : ○ 품명, 수량, 목장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 기재하여 본회로 우송.
 ○ 직접 작업장에서 인수할 농가는 신청수량의 제한이 없으나 협회에서 수송을 원하는 농가는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가급적 차량단위(5톤, 8톤, 11톤 등)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대금의납부 : -1차선납금 : 신청시 총 금액의 50%를 온라인으로 납부
 -2차선납금 : 물품도착전 나머지 50%를 온라인으로 납부

아. 대금납부구좌 : 1) 농협 : 087-01-051624, 2) 예금주 : 한국낙농육우협회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회 알선사업부로 연락바랍니다.(전화 : (02) 588-7055~6, 584-5143, 521-7181)

사단법인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